

우리나라 연구윤리 실태와 개선 방안

● ● 오 대 영 | 중앙일보 논설위원

연구윤리는 학자나 학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만일 부정 연구를 행하는 학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다닌다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지가 꺾이고 학문 발전의 암적 요소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학문의 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와 국가의 역량도 더불어 약화될 것이다. 연구윤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정주의나 부실한 논문 관리 시스템, 정량 평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I .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아무래도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 덕분인 듯싶다. 황 전 교수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상처와 국가가 당한 망신은 짧은 기간 내에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컸지만, 이로 인해 연구윤리를 높이려는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은 그나마 소득이라 하겠다.

연구윤리에는 지식에 관한 것과 연구비에 관한 것이 있다. 연구비 유용 문제도 종종 발생하지만, 그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식의 표절 및 도용, 날조, 논문 건수 부풀리기(자기 복제) 등 지식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한정해 생각해 본다.

연구윤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자신이 연구한 그대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다. 외국이나 국내 기관들의 연구윤리 규정을 봐도 대체로 이런 상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윤리국(ORI)은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기본 규칙으로 정직성(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킨다), 정확성(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효율성(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객관성(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도록 한다)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에 만든 '윤리헌장'(윤리헌장과 표절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활동,

- 정직성=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킨다.
- 정확성=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 효율성=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 객관성=사실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도록 한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소개.)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규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 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 네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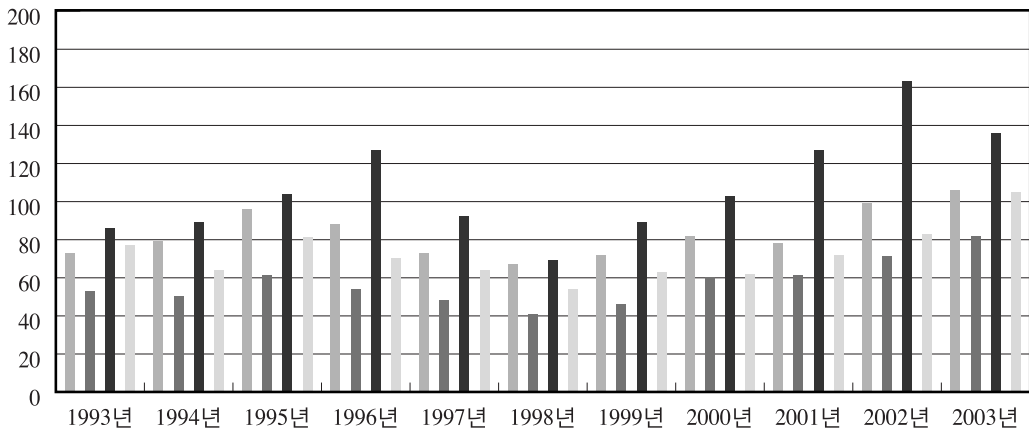
II. 우리의 연구윤리 실태

올해 국내 언론들이 심층 보도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 학계의 연구윤리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에는 외국 서적을 거의 그대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우리 학계의 수준이 낮아 선진국 이론을 도입하기에 급급했던 시절이란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 12위로 성장한 지금도 연구윤리 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아직도 관행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데 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던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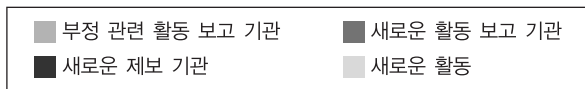
중앙일보가 올 4월 봄 연구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획 시리즈 기사를 보도할 때 학술·연구·채용 전문포털 '하이브레인넷'(hibrain.net)과 공동으로 교수 58명, 대학원생 40명, 연구원 163명 등 석·박사 3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자. 약 94%가 논문 부정행위를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을 받은 결과 부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사람의 96%는 '공동 저자 끼워넣기'를 대표적인 유형으로 들었다. 또 52%는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이미 발표한 자기 논문을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 23%는 후배·제자·대행업체가 논문을 대필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공동 저자 끼워넣기'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논문에는 버젓이 연구자로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 교수가 제자 또는 후배 교수의 논문에 자신을 공동연구자로 올리는 것이 대표적인 '권력형' 이라면, 연구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기 위해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선물형'이다. 황 전 교수 연구와는 거의 관계없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황 전 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록된 것은 대표적인 '선물형'이라 하겠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2003~2005년에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발표했다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보고한 교수 7만여 명 가운데 한 해에 51편 이상 이름을 올린 교수가 262

〈표 1〉 부정행위 보고 기관과 새로운 사건 보고 기관·새로운 과실·새로운 활동의 수

연도	부정 관련 활동 보고 기관	새로운 활동 보고 기관	새로운 제보	새로운 활동
1993	73	53	86	77
1994	79	50	89	64
1995	96	61	104	81
1996	88	54	127	70
1997	73	48	92	64
1998	67	41	69	54
1999	72	46	89	63
2000	82	60	103	62
2001	78	61	127	72
2002	99	71	163	83
2003	106	82	136	10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소개



명이나 됐다. 7명은 100편 이상을 썼다고 보고 했다. 자연과학 계열의 한 교수는 한 해에 149 편의 논문에 이름이 실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런 문제는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벌어진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올해 3월 박사학위 취

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직업을 가지고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논문을 대필시키거나 표절하는데도 교수들이 이를 눈감아주거나, 논문 심사에서 학생과 교수 간에 금품이 오가는 일들이 심심

치 않게 벌어진다고 판단한 국가청렴위원회가 결국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윤리가 낮은 데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Ⅲ. 연구윤리가 약한 구조적 배경

1. 온정주의

“지방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Y씨는 2002년 지도 교수가 자신이 쓴 석사논문(1994년)을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교수는 잘못을 시인했다. 이후 Y씨에게 ‘혼자 깨끗한 척한다’ 식의 비난이 다른 교수들과 대학원생에게서 쏟아졌다. ‘대학 동창회에서 제명시키겠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왕따’ 당해 학교와 접촉을 끊고 사는 그와 달리 표절을 한 지도 교수는 지금도 강단에 있다.(중앙일보 보도)”

하나의 사례지만 우리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학계는 대학, 전공 분야별로 인맥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교수와 제자, 선배와 후배가 뽕뽕 뭉쳐 서로 밀고 당겨주는 것이 우리 학계다. 한국적인 집단 문화성에다 취업 문제 등이 얽혀 이런 문화가 굳어졌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동종(同種)교배’다. 한 학과의 교수 구성에서 그 학과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부른다. 유대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문 발전에는 저해 요소가 많다. 학문은 건전한 비판과 토론 속에서 발전한다. 그러나 동종교배가 많을수록 제자가 스승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당당하게 상대방의 이론을 비판하고 토론하기 힘들다. 그랬다가는 당장 ‘예의없는 놈’이 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

부는 1990년대 후반 대학의 동종교배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상은 거꾸로 흘러갔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이 자신의 논문을 조금 표절했다고 괜히 깐깐하게 비판하면 왕따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이런 점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달라도 학계 대신배의 논문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공 분야가 같으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6년 봄 현재 국내 40개 주요 학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연구윤리나 표절 규정을 제정한 곳은 한국행정학회 등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학회는 논문 투고 규정에 ‘독창적일 것’ 등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니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사실을 규명할 때도 인맥이나 학연에 휘말리거나 온정주의로 두루뭉술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연구 부정이 확인되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앞에서 말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표절 등의 이유로 논문이 취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단 두 건만이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됐고, 나머지는 ‘본인 경고’나 ‘해당 학술지 투고 금지’에 그쳤다. 또 1990년 이후 대학·학회에 적발되거나 언론 보도로 알려진 19건의 논문·저서 표절과 관련된 교수 29명 가운데 26명이 그대로 있었고, 18명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6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당 기관이나 대학에 맡기는데, 대학이나 기관에선 솜방망이로 그칠 때가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이와 관련된 통계도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등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해당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관여하기 힘들어 자율에 맡기지만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나 학계에 지적 재산권 의식이 약한 데 있다. 사회에서 소위 짝퉁이 활개를 쳐도 처벌 규정이 약하듯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심지어 ‘손에 만질 수 없는 지식은 공짜’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서도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연구 부정에 눈감는 데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지적 재산권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법원에선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참조하거나 인용하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변호사가 표절 논문을 내면 협회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할 정도다.

2. 부실한 논문 관리 시스템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논문 관리 시스템이 없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탓도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대학의 학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999년부터 시작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보자.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산된 보고서들은 처음부터 전산화되어 사회나 학계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런 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로 제출된 논문들은 대부분 창고에 보관됐고, 일부는 실종됐다. 현재 학회 차원에서 논문을 전산 관리

하기도 하지만 국내 학술지나 학위 논문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는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수는 1999년 257개에서 2005년에는 1312개로 증가할 정도로 학술지와 발표 논문은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런 논문들을 통합 관리하지 못하니, 특정 논문이 연구윤리를 충실히 지켰는지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박사학위 관리에서도 발생한다. 올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악원이 8년 동안 가짜 러시아 석·박사학위 장사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가짜 학위 장사가 이같이 오랜 기간 가능했고, 이들 학위를 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했던 것은 학위와 논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귀국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진흥재단에 학위 내용과 논문 요약본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신고한다 해도 일일이 해당 외국 대학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받은 학위의 경우는 더욱 힘들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는 내부자 고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 학계 내부의 온정주의로 인해 고발자가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웬만해선 내부자 고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도 올 봄 교육인적자원부에 내년 3월까지 ‘논문 종합DB’를 구축하라고 권고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학과 학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정량 평가 문제

학계에선 논문 편수만 중시하는 평가제도가 논문 부정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중앙일보는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대학종합평가와 학과평가를 실시하는데, 과거에 학과평가를 할 때 실사하면서 지방대의 한 학과가 교수들의 논문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다. 한글 논문과 영어로 번역한 논문을 두 편으로 계산했던 것이다.

대학에서도 교수 업적을 평가할 때 정량 평가를 위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편수를 부풀리기 위해 학교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을 살짝 바꿔 외부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학과 교수들은 사실을 알지만 관행이란 이유 또는 온정주의로 인해 눈감고 넘어간다. 그러면 교수의 업적 평가를 하는 대학 당국은 알기 힘들다. 정부도 BK21 등 국책 사업에서 교수 업적을 평가할 때 외국 학술지 발표 건수 등 정량 평가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등재된 논문 건수다. 이 덕분에 SCI에 등재된 우리 논문 수가 1995년 933건(세계 23위)에서 지난해는 4089건(세계 13위)으로 급증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도 특정 프로젝트를 공모해 당선된 대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거의 '나뉘먹기식 배분'에서 벗어났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결과 대학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연구 부정에 빠지는 유혹도 늘어났다. 가시물인 연구 성과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학계에선 세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완벽하지 않은 연구물이라도 일단 남들보다 한발 먼저 해외 학술지에 등록한 후 보완하자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한다. 완벽하게 만든 후 등록

하면 늦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문가 회의에서도 논문 부정이 빈번한 이유로 지나친 연구 성과주의가 지적됐다. 임기가 정해진 계약 연구직이 많아지고, 연구자가 응모나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받는 경쟁적인 연구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논문 부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학계에선 논문을 양보다는 질로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학술지에 등재됐더라도 양적인 등재 건수 못지않게 인용 빈도나 학문적 중요도와 같은 질을 평가해야 자연스럽게 논문 심사와 평가제도가 강화되고 논문 부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Ⅳ. 외국의 움직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다. 서양이 동양에 비해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대학이나 학계의 자치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과학자들의 연구 부정 사례가 증가했음에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985년 '보건 연구 부속법'을 제정한 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2년 연구윤리국(ORI)을 설치했다. 그리고 연구 부정이 발각될 경우 수년간 연구비 신청을 금지시켰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 덴마크

에서는 정부 윤리국 아래 설치된 과학연구부정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연구 부정 심사·판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논문발표윤리위원회를 조직했고, 2005년에는 보건·생명 의학 연구윤리 국가위원회가 영국대학연합 아래 신설됐다. 독일에는 미국과 같은 연방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기구는 없지만 독일연구재단이나 73개 기초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 등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연구 부정 문제는 종종 발생한다. 일본학술회회가 올해 대학·고등전문학교 등 132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거 10년 동안 12%인 164곳에서 부정 행위 236건이 발생했다. 논문 중복 투고(52건), 연구비 부정 사용(33건), 연구 도용 및 논문 표절(31건)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본학술회회가 이같이 조사한 것은 황우석 전 교수 사건에 일본 학계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의 윤리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는 올 8월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 부정이 확인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회수하고, 연구비 응모를 최대 10년까지 금지키로 했다. 2003년 연구비 자격정지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도쿄대학교 등에서 시행됐지만 정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전국 연구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요즘 이러한 조치는 연구자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외에도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 등에 연구 부정 고발 창구를 만들도록 촉구했다. 그 밖에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험자료를 정밀 심

사하고 연구자를 조사한 후 고발된 지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연구 부정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연구자가 계속 연구비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구 부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다. 일례로 실험 자료나 시약 등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 연구자가 의혹을 해소시킬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연구 부정으로 규정키로 했다. 그 전만 해도 연구 자료가 없으면 연구 부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황우석 전 교수 팀이 자료 손실 등의 이유로 연구 조작을 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보존을 연구윤리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규정 강화 이외에도 연구비를 배정하는 정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자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연구 부정 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구윤리 문제를 조사할 때 한 학회 뿐만 아니라 여러 학회가 공동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문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학문 분야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일본분석화학회는 와세다 대학 교수의 논문 날조 의혹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01년에 발표된 것인데, 중간 조사까지만 무려 5년이 걸렸다. 이 논문에는 바이오, 무기화학물 등 5개 분야의 전문지식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한 분야에서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다.

개별 국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학기술정책심의회는 올해 2월 공동으로 논문 부정 대책 규정을 정

비하고 정보를 공유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일본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실효성이 있는 연구 부정 방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V.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윤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황우석 전 교수 사건 이후 서울대학교나 생명공학연구원 등과 같이 교수 윤리헌장을 만들거나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학과 연구소들이 생겨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은 올 2월 『연구윤리소개』란 책자를 발간했다. 미국 연구윤리국이 대학의 연구윤리 훈련 과정을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자를 번역한 내용이다 일본 대학의 영입 비밀 관리지침 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올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나아가 내년에는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고교 과학교육 과정과 대학 정규 강좌를 통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8년에는 기관과 학회별로 연구윤리 관련 헌장이나 지침을 갖도록 하고, 대학 연구비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학 연구실에서 지켜야 할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적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구윤리는 학자 개인이나 학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지식사회의 최대 자산은 지식이다. 그러나 연구윤리가 회박해 부정 연구가 횡행하고, 그런 학자나 연구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성실히 연구하고 양심적으로 발표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지가 꺾이고, 학문 발전의 암적 요소가 될 것은

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문의 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와 국가의 역량도 약화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윤리를 강화하는데 적극 나선 것은 연구윤리를 국가 경쟁력이란 관점에서 봤기 때문이다.

연구윤리를 높이는 길은 앞서 말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학계의 윤리 의식이 높아져 학자들은 양심에 따라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이나 학회는 논문 평가를 엄격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일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든 윤리헌장이나 조사위원회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그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은 ‘지식 도둑질’이란 의식이 자리잡히고, 잘못된 관행이나 학자들이 받을 못붙이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연구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미국 정부는 교육학 논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에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논문 검증이 가능하고 부정 논문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장기 계획을 세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연구윤리가 하루아침에 높아지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그래도 정부나 학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정부와 학계의 의무일 것이다. **대학총서**

오대영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후 중앙일보 교육담당 기자와 도쿄 특파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